삼일PwC | Issue Brief

G-Zero 시대의 미국, 변하지 않는 전략과 달라지는 사업환경

2026 미국 중간선거 이후 워싱턴 정치 지형 변화에 따른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

November 2026



본 자료에는 AI를 활용하여 생성한 이미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Contents

들어가며 02

본 보고서에 앞서: 선거와 새 의회 출범 사이 03

Executive Summary 04

Part 1. 무엇이 바뀌지 않는가? 05

① 보호무역 강화, ② 대중국 기술 견제, ③ 미국 제조업 부흥,
④ AI 패권 경쟁과 에너지 안보, ⑤ 동맹국의 안보 기여 확대

Part 2. 무엇이 바뀌는가? 17

① 강화되는 의회 견제, ② 느려지는 예산·산업지원 집행,
③ 늘어나는 행정조치와 법적 분쟁, ④ 달라지는 주별 사업조건

Part 3. 그래서 한국 기업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27

Part 4. 경영진은 무엇을 다시 점검해야 하는가? 33

※ 본 보고서는 2026년 11월 6일 삼일PwC와 유라시아 그룹이 개최한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지정학 리스크의 변화」 최고경영자 세미나와 PwC US의 「What the midterms mean for business—and what comes next」(2026년 11월) 등을 참고하여 삼일PwC 경영연구원이 분석·재구성했습니다. 본 보고서는 2026년 11월 9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후 미국의 정치 상황과 정책 변화에 따라 일부 내용과 전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들어가며

세계가 'G-Zero'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가 짙어질수록 그 속도는 더 빨라진다.

냉전 이후 세계는 미국이 홀로 국제질서를 이끄는 G1의 시대를 거쳐, 미국과 중국이 패권을 다투는 G2 구도로 옮겨왔다. 그런데 지금은 그 G2 구도마저 흔들리고 있다. 미국은 세계질서의 관리자 역할에서 한발 물러나 자국 우선으로 돌아섰고, 중국은 미국과 분리된 독자적인 기술·산업 생태계를 키우고 있다. 경쟁은 더 치열해졌지만, 갈등을 조정하고 공동의 해법을 이끌어낼 나라는 보이지 않는다. 이른바 G(Group)-Zero 시대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는 세계경제가 움직이는 방식까지 바꾸고 있다. 미국은 관세로 자국 시장을 지키고, 보조금과 세액공제로 생산시설을 불러들이며, 수출통제로 중국의 첨단기술 접근을 막는다. 동맹국에는 방위비 분담을 넘어 미국 내 투자와 공급망 재편에서도 더 큰 역할을 요구한다. 그러자 다른 나라들도 공동의 규칙보다 자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먼저 따지기 시작했다. 각자도생이 새로운 규칙이 된 셈이다.

문제는 이렇게 커진 갈등의 비용이 결국 미국에도 돌아온다는 점이다. 전쟁과 주요 해상 운송로의 불안은 에너지 가격과 물류비를 끌어올린다. 관세와 공급망 재편은 기업의 조달비용과 투자 여건을 바꿔 놓는다. AI 경쟁도 예외가 아니다. 데이터센터가 늘어날수록 전력과 용수 사용이 급증하고, 이는 전기요금 부담이라는 지역사회의 문제로 번진다. 저마다 자국을 앞세우는 세계가 만들어낸 청구서가 미국인의 생활과 지역경제로 날아들고 있는 것이다.

이번 중간선거는 바로 이런 흐름 속에서 치러졌다. 민주당이 상·하원의 주도권을 쥐면서 2027년부터 트럼프 2기 행정부를 둘러싼 정치 지형은 달라진다. 의회의 조사와 예산 통제는 한층 강해지고, 새로운 산업지원책이나 대형 사업의 결정과 집행은 더 까다로워질 수 있다. 의회의 문턱이 높아진 만큼, 행정부는 행정명령과 기존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더욱 적극적으로 꺼내 들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의회가 바뀌었다고 미국 우선주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보호무역, 대중국 기술 견제, 미국 내 생산 확대, AI·에너지 인프라 확충, 동맹국의 역할 확대는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중간선거 이후 달라지는 것은 미국이 가려는 '방향'이 아니라, 그 방향을 정하고 밀고 나가는 '방식'이다.

그래서 중간선거 이후의 미국을 읽으려면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그대로인지부터 가려내야 한다. 한국 기업에 중요한 것도 어느 당이 이겼느냐가 아니라, 관세와 수출통제, 산업지원, 현지 생산, 전력·용수 확보와 인허가처럼 실제 사업을 좌우하는 조건이 어떻게 달라지느냐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유라시아 그룹과 PwC US의 중간선거 분석을 바탕으로, 미국의 정치 지형 변화가 한국 기업의 사업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삼일PwC 경영연구원의 시각에서 짚어 보았다.

G-Zero의 색채가 짙어질수록 기업이 마주할 정책 환경은 더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워진다. 정책이 확실해지기를 기다렸다가는 늦는다. 지금은 앞으로 2년의 미국 사업 전략을 다시 점검해야 할 때다.

본 보고서에 앞서: 선거와 새 의회 출범 사이

"2027년 1월이 오기 전, 50여일은 트럼프의 시간. 무엇을 할 것인가?"
선거는 끝났지만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

2026년 11월,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확정됐다. 향후 2년간 의회 지형은 달라질 것이다.
하지만 기업이 주목해야 할 것은 선거 결과 자체가 아니다. 트럼프가 이 결과를 이미 계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누가 의회를 장악할지, 어떤 정책이 저항에 부딪힐지, 남은 2년 동안 국정운영에 어떤 제약이 생길지 누구보다 먼저 따져봤을 것이다.
이제 2027년 1월 3일 새 의회가 출범하기까지 약 50일이 남았다. 관건은 이 기간에 트럼프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바꾸느냐다.

Message 1 규제 완화, 속도전이 시작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보다 먼저 움직일 수 있다.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서 앞으로 법안 통과가 어려워진다면 답은 오히려 단순해진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한다'는 것이다.
환경규제 완화, AI 관련 규제 유예, 에너지 프로젝트 승인, LNG 수출 허가 등 행정부 권한으로 가능한 조치를 새 의회 출범 전에 최대한 앞당길 수 있다. 임기 말의 정책 정리가 아니라, 앞으로 2년을 내다본 사전 정지작업에 가까운 움직임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서 새 의회 출범 이후보다 그 전 50여 일이 더 역동적인 정책 변화의 구간이 될 수도 있다. 무엇이 새로 결정되는지만큼이나 무엇이 그 전에 승인되고 시행되는지를 함께 봐야 하는 이유다.

Message 2 대중국 압박은 더 거세진다.

반도체, 배터리, 첨단소재, 관세는 미국 정치권에서 비교적 초당적 지지를 받는 영역이다. 선거 부담이 사라진 상황에서 대중국 강경정책은 가장 선택하기 쉬운 카드일 수 있다.

Message 3 시장(연준)을 향한 메시지가 강해진다.

트럼프는 오래전부터 금리 인하를 요구해왔다. 선거 결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면 희생양은 연준이 될 수 있다. 성장률, 금리, 달러 가치를 둘러싼 논쟁 속에서 연준을 향한 압박이 다시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실제 정책보다 시장 기대를 움직이는 '발언'이 더 중요한 시기다.

Message 4 '경제안보' 기조가 선명해진다.

트럼프의 이야기는 점점 관세를 넘어서고 있다. 핵심은 미국 경제의 안보화(securitization)다. 그에게 "반도체도 안보, 배터리도 안보, AI도 안보, 전력망도 안보"다. 선거 이후에는 개별 산업정책을 넘어 "미국 경제 전체를 국가안보 체계로 재편한다"는 서사가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는 향후 미국 산업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신호탄이 될 것이다.

Message 5 예상 밖의 외교 이벤트가 나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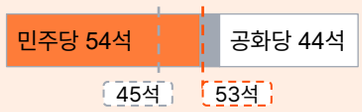
외교 분야에서는 우크라이나·중동·중국을 둘러싼 가시적 성과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국내 정치적 부담을 상쇄하고 미국의 협상력을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는 정책가보다 협상가로 기억되고 싶어 하는 인물이다.

Executive Summary

미국 제120대 의회 중간선거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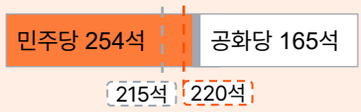
※2026년 중간선거 전 의석수 및 주지사 수: 민주당 공화당

상원 (총 100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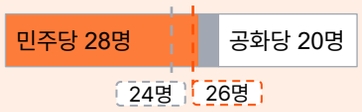
*현재 기준, 2석(알래스카, 미시시피) 미확정

하원 (총 435석)



* 현재 기준, 16석 미확정

주지사 (총 50명)



* 현재기준, 2개 주(알래스카, 캔자스) 미확정

민주당, 의회 주도권과 주지사직 과반 확보했으나 주요 입법을 단독으로 관철하기에는 의석수 한계

- 민주당, 양원 과반 확보로 의회 주도권 확보
- 민주당, 상원 60석에 미달 (6석 부족)해 단독 입법에는 한계
- 민주당,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할 양원 2/3 이상 의석 미확보로 트럼프 정책 전면 수정은 어려움

2027년 1월, 민주당 상·하원 주도 이후,

무엇이 바뀌지 않는가?

- 보호무역 강화
- 대중국 기술 견제
- 미국 제조업 부흥
- AI 패권 경쟁과 에너지 안보
- 동맹국의 안보 기여 확대

무엇이 바뀌는가?

- 강화되는 의회 견제
- 느려지는 예산·산업지원 집행
- 늘어나는 행정조치와 법적 분쟁
- 달라지는 주별 사업조건

그래서 한국 기업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반도체·AI 인프라
미국 투자 이행과 중국 생산거점을 동시에 관리

자동차·배터리
세액공제 복원 여부와 별개로 생산 유연성·공급망 요건 충족 역량 강화

조선·방산
정책적 협력을 실제 발주와 미국 내 사업으로 연결

에너지·전력
전력수요 확대를 수주로 연결하되, 프로젝트 경제성은 별도 검증

철강·산업재
관세 부담 장기화에 대비해 원산지·현지조달 구조 재설계

민주당 주도 새 의회에서도 트럼프 2기 정책의 큰 방향은 지속되나,
정책 결정·집행 과정이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 전략 재점검 필요

01 무엇이 바뀌지 않는가?

: 정책의 방향은 그대로다.

① 보호무역 강화

② 대중국 기술 견제

③ 미국 제조업 부흥

④ AI 패권 경쟁과 에너지 안보

⑤ 동맹국의 안보 기여 확대



무엇이 바뀌지 않는가?

민주당의 의회 장악에도 지속되는 '미국 우선주의'

중간선거 결과 의회 주도권은 민주당으로 넘어갔으나, 미국의 산업·기술·안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자체가 크게 바뀔 가능성은 낮다. 대중국 기술 경쟁, 핵심 공급망의 높은 해외 의존도, AI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 국방 생산능력의 제약 등 미국이 해결해야 할 구조적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에 대응해 관세를 통한 자국 산업 보호와 대중국 첨단기술 통제를 강화하고, 해외 기업의 투자를 미국 내 생산·고용 확대로 연결해 왔다. 또한 반도체·데이터센터와 전력·에너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방·조선 분야에서는 동맹국에 방위비와 미국산 무기 구매를 넘어 공동생산·정비, 공급망 협력 등 보다 폭넓은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의회 주도권을 확보하면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목표보다 정책수단과 추진 방식이다. 대중국 기술 견제, 미국 내 생산기반과 핵심 공급망 강화, AI·국방 등 전략산업의 경쟁력 확보에는 양당의 공감대가 비교적 넓지만, 민주당 주도 의회는 관련 법안과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경제적 비용과 재정 부담, 환경·노동 기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다 중요하게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관세의 범위와 강도, 에너지 정책, 전략산업에 대한 재정지원과 사업 추진 조건 등에서는 행정부와 의회 간 조정이 커질 수 있다.

결국 중간선거 이후에는 미국 우선주의라는 큰 방향보다 이를 추진하는 방식과 속도에서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인 정책수단에는 조정이 나타나더라도 ① 보호무역 강화, ② 대중국 기술 견제, ③ 미국 제조업 부흥, ④ AI 패권 경쟁과 에너지 안보, ⑤ 동맹국의 안보 기여 확대라는 기조는 상당 부분 유지될 전망이다.

중간선거 이후에도 유지되는 미국 우선주의 5대 기조

'어떻게'는 달라져도 '무엇을 강화할 것인가'는 유지					
5대 기조	**1 보호무역 강화**	**2 대중국 기술 견제**	**3 미국 제조업 부흥**	**4 AI 패권 경쟁과 에너지 안보**	**5 동맹국의 안보 기여 확대**
유지되는 방향	• 관세를 산업·통상·투자·재정 수단으로 활용 • 기존 통상 법률(232·301·338조)에 근거한 관세 추진	• 반도체·AI·클라우드 중심 기술통제 지속, 중국과의 선택적 분리	• 대미 투자약속을 실제 생산·고용·현지조달로 연결	• AI 반도체·데이터센터 투자 지속 • 전력·에너지 기반 확충	• 방위비 분담에서 무기 공동생산·정비·공급망 협력으로 역할 확대
민주당 의회의 견제 지점	관세의 법적 근거와 물가·기업 비용 영향 점검	청문회·입법으로 기술통제의 과도한 완화 여부 점검	사업성, 연방 지원의 타당성, 미국 내 생산·고용 효과 검증	예산 적정성, 환경·노동 기준, 지역사회 부담 심사	상호운용성, 예산·조달 투명성 확인
방향이 바뀌기 어려운 이유	**양당의 공감대** 중국 대응, 생산기반·핵심 공급망 강화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하려면 상·하원 각 3분의 2 재의결 필요	**행정부의 집행권한** 관세·수출통제는 기존 법률로 직접 추진 가능		

자료: 삼일PwC 경영연구원

① 보호무역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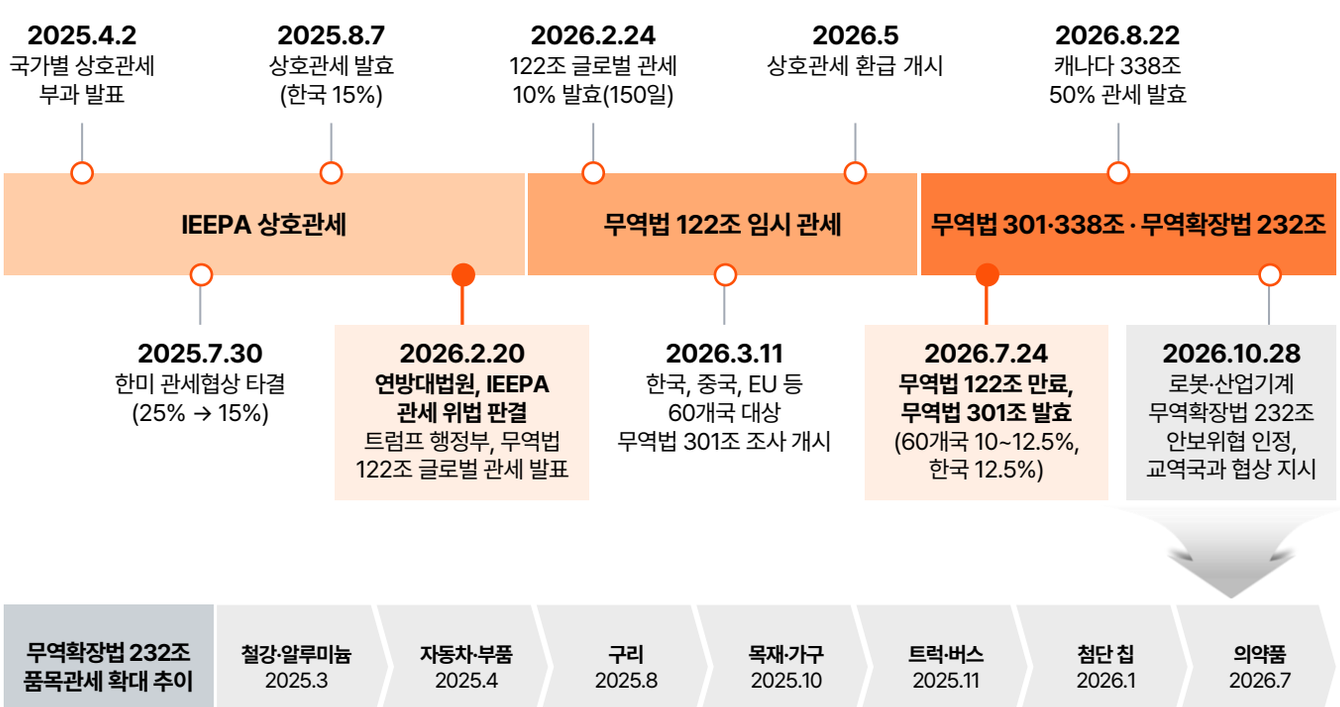
의회가 바뀌어도, 관세는 계속될 전망

중간선거 이후에도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주도 의회가 광범위한 관세를 완화하고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제한하려 할 수 있지만, 관세가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미국 내 생산과 투자를 확대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해 미국 시장에서 해외 제품의 가격을 높이고 미국산 제품을 보호해왔다. 동시에 해외 기업에는 관세 부담을 피하려면 미국에 생산시설을 짓고 현지 투자를 확대하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관세를 수입 억제뿐 아니라 제조업과 핵심 공급망을 미국 내로 끌어들이는 산업정책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다.

관세정책을 이어갈 수 있는 법적 수단도 남아 있다. 2026년 2월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등을 무효로 판단했지만,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등 기존 통상법을 활용해 관세를 유지하거나 대체했다. 특히 국가안보를 근거로 하는 232조는 철강·알루미늄뿐 아니라 자동차·부품, 구리, 목재, 트럭·버스, 반도체, 의약품 등 주요 산업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특정 법률에 근거한 관세가 제한되더라도 산업·안보 목적의 관세는 다른 법률을 통해 이어질 수 있는 구조다.

트럼프 2기 관세정책 주요 변화



자료: 백악관, USTR, 언론 보도자료 종합

늘어난 관세수입, 보호무역을 떠받치는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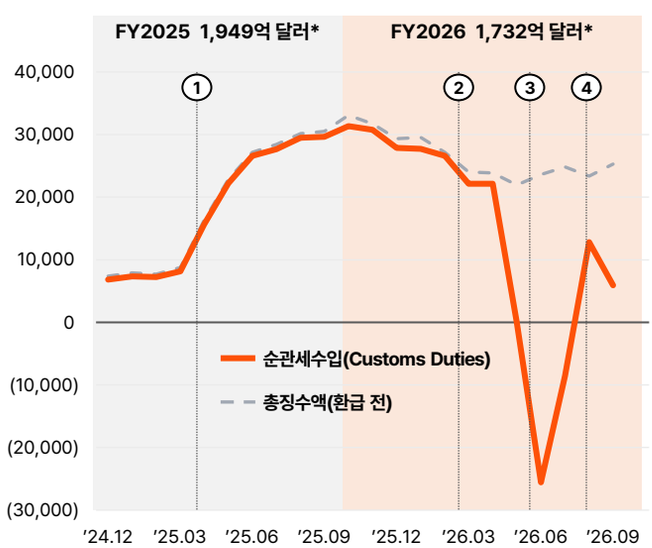
민주당도 모든 관세의 철폐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부과된 관세에는 부정적이지만, 미국 산업과 핵심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에는 선별적으로 접근해왔다. 실제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도입한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대부분 유지됐다. 따라서 민주당 주도 의회는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철회와 신규 관세에 대한 의회 승인 의무화 등을 추진할 수 있지만, 산업·안보 목적의 관세까지 전면적으로 폐지할 가능성은 낮다.

구조적으로 누적된 재정적자도 미국이 관세정책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다. 미국 재무부의 순관세수입은 2024년 약 770억 달러에서 2025년 약 1,949억 달러로 증가했다. 2026년 대법원 판결에 따른 환급 등의 영향으로 약 1,732억 달러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2024년의 두 배를 웃돌았다. 관세수입만으로 재정적자를 해소할 수는 없지만, 대규모 재정적자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미 재정 전망에 반영된 관세수입을 포기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중간선거 이후에도 관세정책이 전면 후퇴할 가능성은 낮다.** 광범위한 국가별 관세는 일부 조정되고 대통령의 관세 권한에 대한 의회 견제는 강화될 수 있다. 그러나 산업·안보 목적의 관세에는 양당의 입장이 일부 겹치고, 행정부가 활용할 다른 법적 수단도 남아 있다. 여기에 미국 내 생산 확대와 재정수입 확보의 필요성이 더해져, 관세의 대상과 방식은 달라져도 보호무역 기조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 관세 수입(Customs Duties)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참고) 트럼프 2기 주요 관세정책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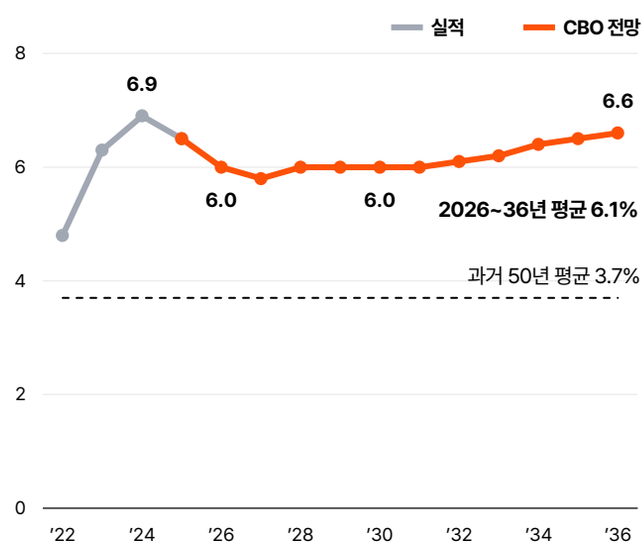
① 2025.4 IEEPA 국가별 상호관세 발효
② 2026.2 대법원 IEEPA 상호관세 위법 판결· 무역법 122조 발효
③ 2026.5 IEEPA 상호관세 환급 개시
④ 2026.7 무역법 122조 만료· 제301조 발효

참고: 순관세수입(Customs Duties)은 총 징수액에서 환급 차감 후 금액
*집계기준: FY2025('24.10~'25.09), FY2026('25.10~'26.09)

자료: 미국 재무부, 월간 재정수지표(Monthly Treasury Statement), 삼일PwC 경영연구원

미국 구조적 재정적자 전망

단위: 잠재 GDP 대비 %



참고: 경기 변동의 영향을 제거한 경기조정 재정적자 기준
자료: 미 의회예산처(CBO, 2026.8), 삼일PwC 경영연구원

② 대중국 기술 견제

접근 방식은 달라도, 첨단기술 견제는 지속

미국의 대중국 기술통제는 의회 주도권 변화에도 쉽게 완화되기 어렵다. 반도체와 AI 등 첨단기술이 산업 경쟁력뿐 아니라 군사·안보 역량을 좌우하면서, 중국의 기술 발전을 견제하고 미국의 기술우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인식이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에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감대는 중간선거 이전부터 확인됐다. 2026년 4월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중국 등 경쟁국에 대한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미국과 동맹국의 통제 기준을 조율하는 MATCH Act[1]를 공동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주요 동맹국이 중국에 핵심 반도체 제조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미국과 수출통제 수준을 맞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중국 기술통제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을 넘어 초당적 기조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미국이 반도체 제조장비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완성된 반도체의 수출만 제한해서는 중국의 기술 발전을 막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국이 해외 장비를 확보해 첨단 반도체의 자체 생산능력을 높이면 AI 반도체 수출통제 효과도 약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통제는 첨단 AI 반도체에서 제조장비와 관련 부품·기술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의 첨단 반도체 구매뿐 아니라 자체 생산능력의 고도화까지 늦추려는 것이다.

다만 중국을 압박하는 방식에서는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관세와 수출통제로 중국을 압박하면서도, 협상 결과와 미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일부 품목의 규제를 조정할 수 있다. 반면 민주당 주도 의회는 청문회·조사·입법을 통해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을 감독할 가능성이 높다. 협상 과정에서 반도체·AI 등 첨단기술 통제가 지나치게 완화되는 것도 견제할 수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압박과 협상을 병행한다면, 민주당 주도 의회는 수출통제의 예외와 우회 경로를 점검하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1) 하드웨어 기술 통제 다자 동조법(Multilateral Alignment of Technology Controls on Hardware Act)은 반도체 제조장비의 대중국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미국과 동맹국의 통제 기준을 조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상·하원 법안 모두 양당 의원이 참여함

유라시아 그룹의 의견

> **"워싱턴에는 중국에 대해 더욱 강경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 미·중 관계의 기본 시나리오는 관리된 디커플링(Managed Decoupling)이다. 관세와 수출통제는 확대되겠지만, 양국 간 교역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 본 발언은 2026년 11월 6일 삼일PwC가 개최한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지정학 리스크의 변화」 최고경영자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임

미·중 디커플링보다, 첨단기술 디리스킹

이처럼 중국의 첨단기술 발전을 견제해야 한다는 데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민주당 주도 의회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다만 이러한 견제가 미·중 기술·경제 관계의 전면적인 단절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 미국은 핵심광물과 대규모 제조 공급망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단기간에 벗어나기 어렵고, 중국도 첨단 연산능력과 반도체 제조장비에서 미국과 동맹국의 기술을 완전히 대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비재와 범용제품의 교역은 상당 부분 유지되는 반면, 첨단 반도체·AI·클라우드와 관련 제조장비에는 강한 통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모든 분야의 연결을 끊기보다 국가안보와 기술우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를 선별해 통제하는 방식이다.

결국 중간선거 이후 대중국 기술 견제는 약화되기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압박·협상과 민주당 주도 의회의 감독·입법이 함께 작동하는 구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개별 품목의 규제 수준과 수출 허용 여부는 달라질 수 있지만, 중국의 첨단기술 접근과 반도체 생산능력의 고도화를 제한하고 미국의 기술우위를 유지하려는 기조는 바뀌기 어렵다.

중간선거 이후 대중국 기술 견제 전망

구분	트럼프 2기 행정부	민주당
기조	양당의 공감대 **중국의 첨단기술 접근과 반도체 생산능력 고도화를 제한하고 미국의 기술우위 유지**	
접근 방식	**압박·협상 병행** 관세와 수출통제로 중국을 압박하되, 협상 결과와 미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일부 품목의 규제 조정	**감독·견제** 청문회·조사·입법을 통해 행정부를 감독하고, 첨단기술 통제의 과도한 완화와 우회 거래를 견제

중간선거 후 예상 방향

미·중 기술·경제 관계의 전면적인 단절보다는
중국의 첨단기술 접근과 자체 생산능력을 제한하는 선택적 통제로 전개

자료: 삼일PwC 경영연구원

③ 미국 제조업 부흥

대미 투자 경쟁, 이제는 약속보다 실행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 내 생산능력과 제조업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주요 교역국과 글로벌 기업의 대미 투자를 유도해왔다. 관세 부담을 피하고 미국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하려면 미국에 생산시설을 짓고 현지 생산과 고용을 확대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대미 투자도 반도체·에너지·조선·핵심광물 등 미국의 산업 기반과 전략산업 공급망을 강화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됐다.

그 결과 한국은 3,500억 달러, 일본은 5,500억 달러, 유럽연합은 6,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미국의 관심은 이제 이러한 투자 약속을 구체적인 사업으로 전환하는 데 맞춰지고 있다. 발표된 투자계획이 프로젝트 선정과 자금 조달, 인허가, 착공을 거쳐 실제 공장 건설과 생산으로 이어져야 미국 내 생산능력과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요국의 투자 약속도 구체적인 사업으로 전환되고 있다. 일본은 현재까지 7개 프로젝트, 약 1,190억 달러 규모의 사업을 구체화했다(2026년 11월 기준). 한국은 발전·원전·LNG 분야의 사업계획을 공개했으며, 유럽연합은 2028년까지 기업별 대미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앞으로 미국은 투자 약속의 총액보다 실제로 공장이 착공됐는지, 생산이 시작됐는지, 미국 내에서 얼마나 많은 부품을 조달하고 일자리를 창출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볼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 부흥의 성과도 발표된 투자 규모보다 미국의 생산능력과 공급망이 실제로 얼마나 확대됐는지를 중심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주요국의 대미 투자를 둘러싼 정책기조 예상

구분	대미 투자약속	주요 분야	이행 현황 (2026.11 기준)	민주당 의회 장악 후 예상
일본	**5,500억 달러**	에너지·핵심광물·AI·반도체·의약품·조선	7개 프로젝트, 약 1,190억 달러 규모의 사업 구체화	투자 요구는 유지되나 사업성·자금 회수와 미국 내 생산·고용 효과에 대한 검증 강화
한국	**3,500억 달러**	조선협력 1,500억 달러, 발전·원전·LNG·반도체 등 전략산업 2,000억 달러	투자체계 마련 후 발전·원전·LNG 분야의 사업계획 공개	사업별 타당성, 미국 내 생산·고용 효과, 의회 감독과 주정부 인허가가 추진속도에 영향
유럽연합	**6,000억 달러**	유럽 기업의 미국 내 제조업·전략산업 투자	2028년까지 기업별 투자계획을 중심으로 이행	현지생산 확대 방향은 유지되나 실제 집행은 기업별 사업성과 노동·환경 기준에 따라 차별화

자료: 언론 종합, 삼일PwC 경영연구원

지원 조건은 달라도, 공장은 미국 안으로

민주당이 의회 주도권을 확보한 이후에도 주요국의 투자 약속을 미국 내 생산시설과 일자리로 전환하려는 흐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도 반도체·에너지·조선·핵심광물 등 전략산업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내 생산기반과 제조업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제조업 부흥은 산업 경쟁력뿐 아니라 미국의 경제·안보와도 직결된다. 반도체·에너지·조선·핵심광물을 해외 공급망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지정학적 충돌이나 공급망 차질이 발생했을 때 미국의 생산과 안보 역량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주요국과 해외 기업의 투자 약속을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핵심 공급망 확충으로 연결하려는 기조는 의회 주도권 변화 이후에도 유지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제조업 투자가 미국 내 일자리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한다. 대규모 생산시설이 들어서면 공장 내 고용뿐 아니라 건설, 소재·부품·장비, 전력, 물류 등 연관 산업의 투자와 일자리도 늘어난다. 주정부와 지역사회에는 세수가 확대되고, 주변에는 관련 기업이 모이면서 새로운 산업생태계가 형성된다.

이미 일부 투자 약속이 구체적인 프로젝트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기업과 정부가 사업 부지를 확정하고 자금과 인력을 투입하기 시작하면 계획을 변경하거나 중단하는 데에도 상당한 비용이 발생한다. 사업이 착공과 생산 단계에 가까워질수록 의회 주도권 변화만으로 추진 방향을 되돌리기 어려워진다.

민주당 주도 의회는 제조업 투자 확대 자체를 중단하기보다 연방지원의 타당성과 사업성과를 점검하는 데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지원금이 실제 생산과 고용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하고, 재정 부담과 노동·환경 기준을 검토하는 방식이다. 이는 제조업 부흥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투자 약속을 실제 성과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사업별 조건을 조정하는 데 가깝다.

결국 중간선거 이후에도 주요국과 해외 기업의 투자를 미국 내 공장·생산·고용으로 전환하려는 제조업 부흥 기조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사업별 지원 조건과 추진 속도는 달라질 수 있지만, 전략산업의 생산능력과 핵심 공급망을 미국 안에 확충하려는 방향은 바뀌기 어렵다.

유라시아 그룹의 의견

>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요구하는 첫 번째는 더 많은 투자다. 한국이 많은 투자를 발표했지만, 실제로 진행 중인 투자는 그보다 적다는 점에 미 상무부와 트럼프 대통령은 다소 불만을 갖고 있다. 미국은 발표된 투자보다 실제로 추진되는 프로젝트를 더 원한다.”**

* 본 발언은 2026년 11월 6일 삼일PwC가 개최한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지정학 리스크의 변화」 최고경영자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임

④ AI 패권 경쟁과 에너지 안보

AI 패권의 조건, 반도체에서 전력망까지

미국의 AI 패권 경쟁은 반도체와 데이터센터를 넘어 전력·에너지 인프라 확보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고성능 반도체와 서버를 확보하더라도 데이터센터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AI 모델 개발과 서비스 확대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데이터센터 확충은 미국의 전력 수요를 빠르게 늘리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2030년까지 증가하는 미국의 신규 전력 수요 가운데 약 25%를 차지할 것으로 분석됐다. 약 15년간 정체됐던 미국의 전력 수요도 최근 5년간 연평균 2.1% 증가했으며, 데이터센터가 주요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1)]

이처럼 데이터센터가 전력 수요 증가를 이끌면서 기존 발전설비와 전력망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대규모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에는 데이터센터를 짓기 어렵다. 시설을 완공하더라도 발전용량이 부족하거나 송전망·변전설비 연결이 늦어지면 운영을 시작할 수 없다. 전력 확보가 데이터센터의 부지 선정과 가동 시기를 좌우하는 핵심 조건이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AI 관련 투자는 첨단 반도체와 서버에서 데이터센터로, 다시 데이터센터를 가동하는 발전·저장설비와 전력망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들 시설이 함께 구축돼야 AI 모델 개발에서 실제 서비스 운영까지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1) 초당적 정책 센터(Bipartisan Policy Center, BPC) 발표(2026년 5월)

AI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핵심 인프라

인프라 영역	주요 시설·기술	확보 필요 이유
첨단 반도체·서버	AI 반도체, HBM, 첨단 패키징, AI 서버	AI 모델의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능력 확보
데이터센터	서버시설, 냉각설비, 네트워크	대규모 AI 연산 처리와 서비스 운영
발전·저장설비	발전설비, 에너지저장장치	데이터센터가 사용하는 대규모 전력의 안정적 공급
전력망	송전망, 변전설비, 계통 연결	생산된 전력을 데이터센터까지 적기에 전달

자료: 삼일PwC 경영연구원

AI 투자는 이어가되, 경제·환경성은 더 엄격하게

트럼프 2기 행정부도 데이터센터와 이를 뒷받침하는 에너지시설을 함께 확충하는 방향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2025년 7월 발표한 행정명령 14318호는 대규모 데이터센터와 관련 에너지시설의 연방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연방 소유지와 오염된 유휴부지의 활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달 발표한 America's AI Action Plan(미국 인공지능 행동 계획)도 에너지 생산과 전력망 용량 확대,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시설의 신속한 건설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러한 정책은 미국이 AI 경쟁력을 모델이나 반도체 성능만의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센터와 전력 공급능력, 전력망을 함께 확보해야 하는 인프라 문제로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AI 기술우위와 에너지 안보가 하나의 정책과제로 연결되는 이유다.

민주당 주도 의회에서도 AI 인프라와 전력기반을 확충하려는 흐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발전설비와 전력망을 확보하지 못하면 미국의 AI 투자와 기술 경쟁력에도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구조적 조건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AI와 에너지의 연계는 중간선거 이전부터 의회에서 논의돼 왔다. 미 의회는 2025년 여러 차례의 청문회에서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 증가와 발전설비·전력망 확충 필요성을 다뤘다. 2025년 4월에는 AI 경쟁력과 에너지 공급, 6월에는 AI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과 원전의 역할, 7월에는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 증가와 전력망 문제가 논의됐다.

따라서 민주당 주도 의회도 AI·전력 인프라 투자를 중단하기보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능력과 전력망을 확보하는 방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와 강조점이 달라질 수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인허가 단축과 에너지 공급 확대를 중시한다면, 민주당 주도 의회는 전력망 확충 비용의 부담 주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 데이터센터의 전력·용수 사용, 환경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히 점검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직접적인 쟁점은 데이터센터 때문에 추가되는 전력 인프라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이다. 신규 발전설비와 송배전망 건설비용이 일반 전기요금에 반영되면 가계와 기존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추가 전력 수요에 필요한 인프라 비용을 적정하게 부담하고, 일반 소비자의 전기요금 상승과 지역사회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주요 사업 조건으로 부상할 수 있다.

결국 **민주당 주도 의회에서도 AI 반도체·데이터센터·발전설비·전력망을 함께 확충하려는 기조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인허가와 공급 확대에 무게를 둔 기존 정책에 비용 부담, 전기요금, 환경·용수 사용과 지역사회 영향에 대한 의회의 점검이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⑤ 동맹국의 안보 기여 확대

돈만 더 내는 동맹에서, 함께 만드는 동맹으로

미국은 오랫동안 유럽·중동·인도태평양의 안보에 폭넓게 관여해왔다. 그러나 **여러 지역의 안보를 동시에 담당하면서 병력 운용과 무기 공급, 재정 부담도 함께 커졌다**. 이에 따라 미국은 동맹국에 국방비를 늘리고 자국과 주변 지역의 방위를 더 많이 책임지도록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 방위산업의 생산능력 문제도 겹쳐 있다. 미국은 첨단 무기기술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자국과 동맹국에 필요한 무기·탄약·함정을 충분한 속도와 물량으로 생산하고 정비하는 데에는 제약을 받고 있다. 빠르게 늘어난 수요에 비해 생산시설과 숙련인력, 핵심부품 공급망을 확충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도 늘어난 방산 수요에 대응하려면 고수요 무기체계의 생산능력과 공급망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요구는 더욱 구체화됐다. 동맹국에 방위비와 미군 주둔비를 더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늘어난 지출이 실제 군사역량과 방산 생산능력 확충으로 이어지도록 압박하고 있다. 동맹국은 필요한 무기를 확보하는 한편, 미국 기업과 무기·탄약·함정을 공동생산하고 미국 장비의 유지·보수·정비를 분담하며, 미국 내 방산·조선시설에도 투자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동맹국의 기여는 경제안보 분야로도 넓어지고 있다. 미국은 통상협상에서 미국산 에너지 구매와 대미 투자를 요구하는 한편, 반도체·배터리·핵심광물의 중국 의존도도 낮추도록 압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맹국의 역할은 방위비와 무기 구매를 넘어 방산 생산·정비, 대미 투자, 핵심 공급망 협력으로 확대되고 있다.

동맹국의 방위지출도 크게 늘고 있다. 2022년부터 2026년 사이 국방지출은 덴마크 179%, 노르웨이 135%, 스웨덴 126%, 캐나다 94%, 독일 8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증가율은 9%로 상대적으로 낮지만, 2026년 지출 규모는 약 1조 달러로 여전히 압도적이다. 미국이 세계 최대 규모의 국방지출을 유지하는 가운데 동맹국도 이전보다 빠르게 지출을 늘리고 있다는 뜻이다.

주요 동맹국의 국방지출 확대(2022~2026년)

(단위: 십억 달러)

국가	2022	2025	2026	증가율(2022~2026)
덴마크	6.6	17	18.5	+179%
노르웨이	9.1	21	21.3	+135%
스웨덴	11.3	22.2	25.6	+126%
캐나다	29.6	54.1	57.3	+94%
독일	77	115.8	141.6	+84%
폴란드	19.1	39.3	32.7	+71%
핀란드	5.9	9.6	9.3	+57%
프랑스	67.7	76.8	83.7	+24%
영국	88.6	95.2	106	+20%
미국	926.2	990.4	1,000	+9%

참고: 2026년은 NATO의 '2035년 GDP 대비 5%' 목표를 반영한 전망치이며, 금액은 FY2025 달러 기준. 증가율은 원자료 기준으로 반올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CSIS, "U.S. and Allied Burden Sharing: A Progress Report"(2026.9), NATO, 삼일PwC 경영연구원

트럼프도 민주당도, 동맹에는 더 많은 역할 요구

이러한 방향은 민주당의 상·하원 주도권 확보 이후에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동맹국이 자체 방위역량을 강화하고 미국과 함께 방산 생산기반과 핵심 공급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에는 양당 간 이견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동맹국의 역할 확대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강화됐지만, 그 배경에는 미국의 글로벌 안보 부담과 방위산업의 생산능력 제약이라는 구조적 요인이 자리 잡고 있다.

다만 동맹국의 기여를 요구하고 평가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방위비와 미국산 구매, 대미 투자처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기여와 신속한 이행을 국가별 협상에 직접 연계한다. 반면 민주당은 NATO와 같은 다자 동맹의 유지, 동맹 간 공동 대응능력과 상호운용성, 예산·조달의 투명성을 상대적으로 더 중시한다. 접근 방식은 다르지만 동맹국에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한다는 방향은 같다.

결국 중간선거 이후에도 동맹국의 부담은 줄어들기 어렵다. 동맹국은 방위비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군사역량을 확충하고 미국과 함께 무기·함정을 생산·정비하며 핵심 공급망을 구축하도록 요구받을 전망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의회 민주당 기조 비교

구분	트럼프 2기 행정부 기조	민주당 기조	중간선거 이후 방향(전망)
방위비·방위역량	국방비 증액과 자체 방위책임의 신속한 확대 요구	다자 동맹의 공동 준비태세와 대응능력 중시	국방비 증액과 실제 군사역량 확충 요구 지속
미국산 구매	미국산 무기·에너지 구매를 국가별 협상에 연계	필요성·가격·조달 투명성·상호운용성 중시	구매 요구는 유지되며 조달 효과에 대한 검토 병행
공동생산·정비	무기·탄약·함정의 공동생산과 MRO 확대 요구	기술보호·조달 투명성·동맹 간 역할 분담 중시	무기 구매에서 공동생산·정비로 협력 확대
대미 투자	방산·조선·에너지 투자의 규모와 조기 이행 강조	사업성과 미국 내 생산·고용 효과 중시	실제 착공·생산·고용 성과의 중요성 확대

자료: 삼일PwC 경영연구원

02 무엇이 바뀌는가?

: 워싱턴의 게임 룰이 바뀐다.

① 강화되는 의회 견제

② 느려지는 예산·산업지원 집행

③ 늘어나는 행정조치와 법적 분쟁

④ 달라지는 주별 사업조건



무엇이 바뀌는가?

민주당의 의회 주도권 확보 → 정책 폐기보다 추진 과정에 대한 감시 강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민주당의 의회 주도권 확보에도 미국 우선주의의 큰 방향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이를 추진하는 정치적 환경과 국정 운영 방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의회 주도권을 확보한 민주당은 행정부의 권한 행사와 예산 집행을 이전보다 강하게 조사하고 감독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의회 주도권만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을 모두 되돌리기는 어렵다.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법안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려면 60석이 필요하지만 54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려면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이 역시 확보하지 못했다. 결국 민주당이 주요 정책을 입법으로 변경하려면 공화당 일부의 협조가 필요한 구조다.

이에 따라 행정부와 의회는 서로 다른 수단을 활용해 정책 주도권을 확보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의회 동의를 얻기 어려운 분야에서 행정명령과 기존 법률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을 활용해 정책을 추진하는 반면, 민주당 주도 의회는 조사·청문회와 예산 심의를 통해 행정부의 권한 행사가 적법한지,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는지, 정책이 당초 목적에 맞는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2026년 중간선거 결과

2026년 11월 중간선거 결과

	상원	하원
민주당 확보 의석	**상원** 100석 중 민주당 54석 확보 민주당 54석 (51 / 60 / 67 / 100)	**하원** 435석 중 민주당 254석 확보 민주당 254석 (218 / 290 / 435)
과반 기준 (다수당)	51석 — 충족	218석 — 충족
일반 법안 통과 요건	출석의원 과반 찬성(51석 이상) — 충족 단, 표결을 막는 필리버스터 종결에는 60석 필요 — 6석 부족	출석의원 과반 찬성(218석 이상) — 충족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 요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전원 출석 시, 67석) — 13석 부족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전원 출석 시, 290석) — 36석 부족
시사점	**민주당 의회 주도권 확보** 상·하원 모두 과반 확보 → 의사일정·조사·청문회 주도	**민주당 단독 입법 한계** 상원 필리버스터 종결 요건에 민주당 6석 부족
	민주당 단독 거부권 무력화 한계 대통령 거부 법안의 재의결 요건에 민주당 상원 13석, 하원 36석 부족	**민주당 단독 탄핵 추진의 한계** 하원 과반 확보로 탄핵소추 추진은 가능 상원 2/3(67석)미확보로 대통령 파면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참고: 미국 중간선거 결과는 2026년 11월 10일 기준이며, 일부 미확정 의석은 제외함.
자료: 언론 종합, 삼일PwC 경영연구원

같은 방향 속, 더 길어지는 정책의 결정과 집행

따라서 중간선거를 계기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정책의 큰 방향보다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과정이다. 민주당 의회가 트럼프 2기 정책을 일괄적으로 폐기하기 어렵지만, 행정부 역시 의회의 조사와 예산 통제를 완전히 피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정책 심사와 예산 협상은 길어지고,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조치와 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은 늘어나면서 정책 추진 속도가 느려지고 불확실성도 커질 가능성이 높다.

연방 차원의 정책 결정과 집행이 복잡해질수록 기업에는 어느 주에서 사업을 추진하느냐도 더욱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주정부의 인센티브뿐 아니라 전력·용수 공급 여건, 환경·노동 규제, 인허가 조건 등에 따라 투자비용과 사업 추진 속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크게 네 가지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1 강화되는 의회 견제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과 예산 집행에 대한 의회 조사·감독 확대

2 느려지는 예산·산업지원 집행

신규 예산과 입법이 필요한 사업의 지연 가능성

3 늘어나는 행정조치와 법적 분쟁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우회 조치가 늘면서 권한과 적법성을 둘러싼 소송 증가

4 달라지는 주별 사업조건

전력·용수·환경·노동·인허가 등에 따른 주별 사업 여건 차이 확대

① 강화되는 의회 견제

행정부의 권한이 클수록, 의회의 견제도 강하게

2027년 새 의회에서 가장 먼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행정부에 대한 조사·감독의 강도다. 민주당은 상임위원회 운영을 주도하면서 청문회와 조사, 자료 제출 및 증언 요구 등을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을 본격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된다. 상원에서는 장관·대사·연방판사 등 주요 인사의 인준 과정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민주당 주요 인사들도 선거 승리 이후 행정부에 대한 조사와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다만 의회의 견제 방식과 강도는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 동의 없이 어느 범위까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관세와 대중국 기술통제처럼 기존 법률에 따라 행정부가 상당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정책을 바로 중단시키기보다 법적 근거와 집행 과정을 조사하고 관련 권한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산업지원·재정지출·세제지원처럼 새로운 법률이나 예산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의회가 지원 규모와 대상, 조건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외교·군사처럼 양측의 권한이 맞물리는 분야에서는 예산과 입법, 대통령 권한을 둘러싼 충돌이 커질 수 있다.

정책 분야별 행정부 단독 권한과 2027년 이후 의회·행정부 대응 전망

정책 분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의회 동의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범위	2027년 이후, 예상 대응 방향	
		민주당 주도 의회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통상	기존 통상법에 근거한 관세 부과·조정	• 대통령 관세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 추진 • 일부 품목·국가 관세 철폐 요구 • 관세의 물가·산업 영향 청문회	• 기존 통상법상 권한으로 관세 유지·조정 • 권한 제한 법안에는 거부권 행사
대중국 기술통제	수출통제 대상·거래 허가 등 조정	• 기술 통제 자체는 초당적 지지로 유지 • 첨단 반도체 등 예외 허가의 적정성 점검 • 집행 실태 조사·청문회	• 기존 수출통제 권한으로 통제 지속 • 협상 상황에 따라 허가·예외 범위 조정
외교·군사	외교정책과 대통령 권한 범위 내 군사행동	• 국방·전쟁 관련 예산 통제 • 군사행동의 법적 근거·절차 점검 • 전쟁권한 제한 결의안 추진	• 대통령 권한으로 외교·군사 정책 추진 • 권한 제한 결의·법안에는 거부권 행사
산업지원·재정지출	이미 승인된 법률·예산 범위 내 사업 집행	• 신규 지원의 규모·대상·조건 조정 • 예산 집행 보류·지연 여부 감독 • 세출법안 심의로 예산 통제	• 기존 사업은 행정부 재량으로 집행 • 추가 지원과 신규 예산은 의회와 협상

참고: 행정부가 의회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는 관련 법률과 사안에 따라 다르며, 의회는 입법·예산·감독·인준 등의 권한을 통해 이를 견제할 수 있음
자료: 삼일PwC 경영연구원

새 의회의 검증대, 행정부 넘어 기업까지

사실, 민주당은 중간선거 전부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정책과 권한 행사를 비판해왔으며, 선거 승리 이후에는 이를 새 의회의 권한을 활용해 견제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이란 전쟁과 관세, 의료지원 등에서는 입법과 예산을 통해 정책 변경을 추진하는 한편, 행정부 운영과 정부계약,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이해충돌 의혹, 기업과 행정부의 관계 등에 대해서는 조사와 청문회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2027년 새 의회에서 예상되는 민주당의 주요 견제 이슈

주요 이슈	민주당이 제시한 견제 방향	활용 가능한 의회 수단
이란 전쟁	전쟁 조기 종식 추진, 대통령의 군사행동 견제	국방예산, 전쟁권한 관련 입법·청문회
관세	캐나다 관세 등 징벌적 일부 관세 철폐, 대통령 관세 권한 제한 추진	관련 법률 개정, 조사·청문회
의료·생활비	오바마케어(ACA) 세액공제 연장, 메디케이드 삭감 복원	세법·예산 관련 입법
행정부 운영	정책 결정·예산 집행·이민정책 등에 대한 조사 강화	상임위 조사·청문회, 자료 제출·증언 요구
이해충돌·정부계약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사업상 이해충돌 의혹, 정부계약·기업 특혜 여부 조사	자료 제출 요구, 관계자·기업 경영진 청문회·소환
AI·빅테크	AI 안전·책임, 정부와 기업 간 관계 및 정부계약 점검	조사·청문회, 관련 입법
AI 데이터센터	전력·환경·지역사회 부담 점검, 일부 의원은 건설 제한 주장	청문회·입법, 연방지원·예산 심의

자료: 언론 종합, 삼일PwC 경영연구원

또한, **의회의 조사 범위는 행정부를 넘어 연방정부의 지원이나 계약에 연결된 기업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계약과 연방지원의 비중이 큰 AI·우주·에너지·국방 등의 산업에서는 사업자 선정 과정과 자금 사용뿐 아니라 투자·고용 등 정부지원과 연계된 약정의 이행 여부, 정부와 기업 간 관계까지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관련 기업은 정책 변화 자체뿐 아니라 정부지원·계약의 근거와 자금 사용, 투자·고용 약정의 이행성과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정부 제출자료와 대외공시, 내부 관리자료를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다.

결국 민주당 주도 의회의 출범은 트럼프 2기 정책을 일괄적으로 폐기하기보다, 정책 추진에 사용된 권한과 예산, 집행 과정과 성과를 보다 엄격하게 검증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행정부가 기존 권한을 활용해 정책 기조를 이어가더라도, 정책의 법적 근거와 예산 사용, 기업과의 관계를 설명해야 하는 부담은 이전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

② 느려지는 예산·산업지원 집행

기존 지원은 계속, 신규 지원은 더 느리게

중간선거 이후 연방예산과 산업지원에서는 지원의 방향보다 새로운 예산과 추가 지원을 결정하는 과정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이미 법률과 예산에 근거해 진행 중인 사업은 상당 부분 그대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신규 사업이나 추가 지원은 백악관과 의회가 합의해야 한다. 예산 규모와 지원 대상, 조건을 놓고 협상이 필요한 만큼 결정부터 실제 집행까지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변화를 가늠할 첫 시험대는 FY2027(2027 회계연도) 예산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2027 회계연도는 이미 10월 1일 시작됐지만 정규예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 연방정부는 12월 11일 만료되는 임시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 의회는 중간선거 이후 11월 9일 다시 소집돼 예산과 국방 관련 법안 처리를 재개한다.

관건은 현 의회가 2026년 12월 말까지 예산 협상을 얼마나 마무리하느냐다. 공화당은 내년 1월 의회 주도권이 민주당으로 넘어가기 전에 정규예산과 국방 관련 법안을 처리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원에서 세출법안을 통과시키려면 필리버스터 종결에 필요한 60석을 확보해야 하므로, 공화당 단독으로는 처리가 어렵고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연내 합의에 실패해 추가 임시예산으로 넘어가면, 남은 쟁점은 2027년 1월 3일 출범하는 민주당 주도 새 의회에서 다시 협상해야 한다.

협상이 길어질수록 전체 지출 규모뿐 아니라 어느 분야에 재원을 먼저 배분할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백악관은 국방지출 확대를, 민주당은 의료·복지지출을 중시하는 등 양측의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업별 예산 규모와 집행 시기를 둘러싼 조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미 승인된 사업보다 새로운 재원이 필요한 사업이나 신규 보조금·계약이 협상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 연방정부, FY2027 예산 일정

시점	주요 일정	예산·사업에 미치는 영향
2026년 4월 3일	트럼프 2기 행정부 FY2027 예산안 제출	국방지출 확대·비국방 재량지출 축소 등 행정부의 예산 우선순위 제시
4~6월	하원, 12개 세출법안 심사	12개 법안 모두 하원 세출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양원 간 예산 규모·우선순위에 이견 지속
9월 2일	임시예산 확정	정규예산 대신 대부분 FY2026 수준으로 12월 11일까지 정부 운영
10월 1일	FY2027 시작	정규예산을 확정하지 못한 채 임시예산으로 회계연도 시작
11월 3일	중간선거	민주당이 차기 의회 주도권 확보
11월 9일	현 의회 복귀	공화당이 주도하는 레임덕 회기에서 남은 FY2027 예산 협상 재개
12월 11일	임시예산 만료	정규예산 또는 추가 임시예산 필요
2027년 1월 3일	민주당 주도 새 의회 출범	미합의 예산이 넘어오면 새 의회에서 협상 지속

자료: 언론 종합, 삼일PwC 경영연구원

정책 방향이 겹치는 산업은 지원 지속, 차이가 큰 산업은 협상 장기화

그렇다고 모든 산업지원이 같은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률이나 계약으로 근거가 마련된 사업은 집행이 이어질 수 있지만, 새로운 입법이나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협상 결과에 따라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 어느 쪽에 속하는지는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민주당의 정책 방향이 얼마나 겹치느냐에 달려 있다.

먼저 미국 내 생산기반 확대에 양측이 뜻을 같이하는 반도체는 기존 지원이 유지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른 제조지원은 이미 체결된 계약에 따라 집행되므로, 지원의 존폐보다 보조금 집행과 투자 성과, 조건 준수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배터리·핵심광물도 지원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관건은 지원조건이다.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는 유지되고 있으나 2025년 세법 개정으로 금지외국기관(PFE) 관련 제한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중국 연계 기업에서 원재료·부품을 조달하는지, 그리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지가 공제 적용을 가르는 기준이 되고 있다.

반면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큰 전기차와 일부 청정에너지는 축소된 지원의 복원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다만 이미 법률로 바뀐 제도를 되돌리려면 새로운 입법과 재원이 필요하고 대통령의 거부권도 넘어야 해, 과거 IRA(인플레이션감축법) 체계가 곧바로 복원되기는 어렵다.

결국 민주당의 의회 장악이 산업지원의 일괄 확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책 방향이 겹치는 산업은 조건과 성과가, 차이가 큰 산업은 복원 여부와 시기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주요 산업지원의 정책 방향과 2027년 변화 전망

산업	현재 주요 지원	트럼프 2기 행정부 방향	민주당 기조	2027년 변화 전망
반도체	CHIPS Act 제조 보조금, 첨단제조 투자세액공제	미국 내 생산 확대, 지원 성과·조건 중시	미국 내 생산기반 확대, 기존 지원 유지	**지원 지속 가능성 높음** → 보조금 집행, 투자 성과, 조건 준수가 변수
배터리·핵심광물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미국 내 생산 확대, 중국 연계 공급망 제한 강화	미국 내 제조·핵심광물 공급망 확대	**지원 지속 가능성 높음** → PFE 등 공급망 요건이 핵심 변수
청정에너지	청정전력 생산·투자 세액공제 등	일부 지원 축소, 요건 강화	투자·세제지원 유지·확대 선호	**현행법 일정에 따라 적용** → 축소된 지원을 되살리려면 추가 입법 필요
전기차	소비자 구매 세액공제 종료	구매지원 폐지 기조 유지	지원 복원·확대 추진 가능	**복원 논의는 가능하나 실현은 불투명** → 입법·재원·대통령 거부권이 변수

자료: 삼일PwC 경영연구원

③ 늘어나는 행정조치와 법적 분쟁

의회가 막으면 행정조치로, 뒤에는 법적 분쟁

2027년 민주당 주도 의회가 출범하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정책을 새로 추진하거나 기존 정책을 확대하는 데 제약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행정명령과 기존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행정부는 중간선거 이전부터 이민·관세·주택·연방지출 등을 중심으로 의회의 추가 승인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해왔다. 동시에 각 조치를 법적으로 어디까지 추진할 수 있는지, 소송이 제기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도 함께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행정명령만으로 새로운 법률을 만들거나 의회가 정한 예산을 임의로 바꿀 수는 없다. 행정부의 조치는 헌법과 기존 법률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행정부가 기존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수록 대통령과 행정부가 해당 조치를 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를 둘러싼 논쟁도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법원이 행정부의 권한을 제한하면 정책의 시행이나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지만, 다른 법적 근거가 있다면 정책수단을 바꿔 기존 정책 방향을 이어갈 수도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트럼프 2기 관세정책에서 이미 일부 확인됐다. 2026년 2월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광범위한 관세 부과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관세정책 자체를 중단하지 않고, 무역법 제301조와 무역확장법 제232조 등 다른 통상법상 권한을 활용해 관세정책을 이어갔다. 법원의 판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달라졌지만, 보호무역이라는 정책 방향은 이어진 것이다.

민주당 주도 의회가 출범하는 2027년부터는 이처럼 행정조치와 법적 분쟁이 맞물리는 사례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의회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분야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기존 법률상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수록, 해당 권한의 범위와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책 방향은 유지되더라도 이를 추진하는 법적 근거와 수단이 소송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다.

결국 중간선거 이후에는 정책의 방향뿐 아니라 그 정책이 어떤 법적 근거와 수단으로 추진되는지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행정조치는 의회 입법보다 빠르게 시행할 수 있지만, 소송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시행 시점이나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기업도 새로운 정책이 발표됐다는 사실만 보기보다 법적 근거와 시행 시점, 소송 진행 여부와 법원의 판단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④ 달라지는 주별 사업조건

같은 미국 투자도, 어느 주에 하느냐가 변수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연방 의회뿐 아니라 주정부의 정치 지형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민주당은 텍사스·조지아·오하이오·아이오와·네바다 등 공화당이 보유했던 5개 주지사직을 가져오며 주지사직을 28개 주로 확대했다. 특히 **AI·데이터센터와 첨단산업 투자가 확대돼 온 텍사스·조지아·오하이오에서도 주지사가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뀌면서, 2027년 새 주정부 출범 이후 투자 관련 정책이 어떻게 달라질지가 새로운 변수로 부상했다.**

주정부의 정치 지형 변화가 기업에 중요한 이유는 실제 투자사업의 실행조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연방정부가 산업지원이나 세제혜택을 제공하더라도 공장이나 데이터센터를 실제로 건설하려면 해당 지역에서 전력·용수를 확보하고 주·지방정부의 인허가를 거쳐야 한다. 여기에 주정부의 투자 인센티브와 전력·인프라 정책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같은 연방지원 아래에서도 실제 사업비와 착공·가동 시점은 지역별로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특히 AI 데이터센터가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전기요금과 전력망 증설비용, 용수 사용, 세제혜택 등이 주요 지역 현안으로 부상했다. 데이터센터 확대에 따른 전력·용수와 인프라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가 유권자의 관심사로 확대되면서, 일부 주에서는 신규 개발을 제한하거나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2027년부터는 데이터센터 유치 여부 자체보다 어떤 조건으로 신규 개발을 허용하고 지원할 것인지가 주별 정책의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주지사가 교체된 주요 투자거점의 2027년 변화 전망

지역	지역의 주요 투자분야	당선인 및 정책 기조	2027년 정책 변화 전망
텍사스	AI·데이터센터, 반도체, 에너지	• 지나 이노호사 주지사(민주당) • 기조: 데이터센터 신규 개발 제한, 주민의 전기요금·전력·용수 부담 완화	신규 데이터센터 승인, 전력·용수와 인프라 비용 부담, 세제혜택 재검토 가능
조지아	데이터센터, 배터리·전기차, 태양광	• 키샤 랜스 보텀스 주지사(민주당) • 기조: 데이터센터 개발조건과 지역사회 부담 점검	개발·인허가 조건, 전력·인프라 비용과 투자 인센티브 조정 가능
오하이오	AI·데이터센터, 첨단제조	• 에이미 액턴 주지사(민주당) • 기조: 데이터센터의 전기요금·전력망 부담 점검	전력망 비용 분담, 데이터센터 세제혜택·인허가 조건 조정 가능

참고: 당선인의 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정책 방향을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실제 정책의 시행 여부와 범위는 각 주의 의회·규제기관·지방정부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세 지역 모두 이번 선거에서 주지사직이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전환됨

자료: 언론 종합, 삼일PwC 경영연구원

투자는 미국으로, 사업성은 주정부가 결정

이러한 변화가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곳은 텍사스다. 데이터센터의 전력·용수 사용과 주민 전기요금 부담이 선거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지나 이노호사 당선인은 주민 보호를 위한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신규 데이터센터 승인을 중단하고 세제혜택과 전력·용수 관련 조건을 재검토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다만 실제 정책 변화의 범위와 속도는 주 의회 구성과 입법·규제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주별 사업조건의 변화를 민주당 주지사의 확대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데이터센터가 집중된 지역에서는 선거 이전부터 급증하는 전력수요와 전력망 증설비용, 주민 전기요금, 용수 사용 등을 둘러싼 문제가 커져왔다. 이번 중간선거는 이러한 지역 현안이 실제 선거 쟁점으로 부상하고, 주요 투자지역의 주정부 정치지형 변화와 맞물리면서 2027년부터 구체적인 정책과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

결국 중간선거 이후 달라지는 것은 미국의 AI·첨단산업 투자 방향 자체보다 실제 투자를 실행하는 지역별 조건일 가능성이 높다. 투자 수요가 이어지더라도 어느 주에서 사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 전력·용수 확보, 세제혜택, 인허가, 인프라 비용 부담이 달라지면서 프로젝트의 사업비와 착공·가동 시점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대미 투자지역을 결정할 때 연방지원뿐 아니라 새 주정부의 정책 방향과 전력·용수 확보 가능성, 인센티브 조건, 인허가 일정과 추가 인프라 비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생겼다.

유라시아 그룹의 의견

> **"각 주는 신규 데이터센터와 AI 인프라 프로젝트에 조건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한다. 전력비 부담, 노동 요건, 환경 문제, 지역사회 편익(Community Benefits)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데이터센터 건설은 전반적으로 계속될 것이다."**

* 본 발언은 2026년 11월 6일 삼일PwC가 개최한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지정학 리스크의 변화」 최고경영자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임

03 그래서 한국 기업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한국 기업이 주목하고 대응해야 할 것

정책의 답을 기다리기보다, 사업 전략 재점검

민주당이 차기 상·하원의 주도권을 확보했지만, 미국의 보호무역과 대중국 기술 견제, 미국 내 생산 확대 기조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은 낮다. 다만 2027년 민주당 주도 의회가 출범하면 예산과 산업지원을 둘러싼 협상이 길어지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결정과 집행에 대한 조사·감독도 강화될 전망이다. 주요 투자지역의 주정부 정책 변화까지 더해지면서 한국 기업이 실제로 적용받는 관세와 지원조건, 인허가, 공급망 요건과 사업 일정은 한층 복잡해질 수 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은 정책 완화를 기대하기보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조건부터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관세와 수출통제는 현행 기준을 바탕으로 대응하되, 의회의 예산·감독과 주정부의 전력·용수·인허가 정책이 사업비와 일정에 미칠 영향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 특정 지원의 복원이나 확대를 전제로 사업계획을 고정하기보다, 정책과 시장 변화에 따라 투자·생산·조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응의 우선순위는 산업마다 다르다. 반도체는 미국 투자계획의 이행과 중국 생산거점의 규제 위험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 자동차·배터리는 북미 생산체계와 공급망 적격성을 점검하고, 전기차·하이브리드·ESS 간 생산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조선·방산은 미국과의 정책적 협력을 실제 발주와 현지 사업으로 연결해야 하며, 에너지·전력망은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수익성 있는 프로젝트로 전환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철강·산업재는 관세가 지속되는 상황을 전제로 원산지와 생산·조달 구조, 계약조건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 주도 새 의회 출범에 따른 산업별 영향 및 대응

산업	예상 변화	한국 기업 대응
반도체·AI 인프라	• 대미 투자 이행 점검 강화 • 데이터센터 투자 일정 변동 가능	• 미국 투자·고용 실적 관리 • 중국 공장 허가와 AI 반도체 수요 점검
자동차·배터리	• 전기차 지원 복원 여부 불확실 • 중국 연계 공급망에 대한 제한 강화	• EV·하이브리드·ESS 생산 유연화 • 원산지·지분구조 등 공급망 적격성 점검
조선·방산	• 국방예산에 따른 발주시점 변동 • 동맹국 조선소 활용범위 조정 가능	• 정비·지원함 등 진입분야 구체화 • 최종 예산·조달규정·발주시점 확인
에너지·전력망	• 주별 전력망 연결·인허가 조건 차이 • 발전·저장·송배전 수요 확대 가능	• AI 전력수요와 연계된 수주 기회 발굴 • 주별 사업조건과 프로젝트 수익성 검증
철강·산업재	• 품목별 관세 지속 가능성 • 미국 내 생산·조달 우대 강화	• 품목·원산지별 실제 관세부담 점검 • 현지 조달과 관세 관련 계약조건 재정비

자료: 삼일PwC 경영연구원

주요 산업별 대응 방향(상세)

민주당의 의회 주도권 확보로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이 달라질 가능성이 커진 만큼, 한국 기업의 대응 과제도 산업별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각 산업의 핵심 변수를 중심으로 지금 점검하고 준비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반도체·AI 인프라

미국 내 반도체 생산기반 확대와 대중국 첨단기술 통제는 중간선거 이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개별 품목의 수출허가 범위와 예외조건은 달라질 수 있지만,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접근과 생산능력 확대를 제한하려는 방향은 유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국 반도체 기업은 미국에서는 투자계획을 실제 생산과 고용으로 연결하고, 중국에서는 공장 운영에 필요한 장비·부품·기술의 규제조건을 관리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투자액과 착공·가동 일정, 생산능력과 현지 고용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사업 일정이 변경될 경우 그 사유를 정리하고, 계약상 약정과 정부 제출자료, 대외공시 간 일관성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중국 생산거점에서는 미국산 장비·부품의 반입과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필요한 허가와 갱신 시점을 공장별로 관리해야 한다. 허가 지연이나 규제 강화에 대비해 부품 재고와 유지보수 계획, 대체조달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AI 반도체 수요는 빅테크의 투자금액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데이터센터의 인허가와 전력망 연결이 늦어지면 서버와 HBM·D램의 발주 시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센터 착공·전력망 연결 → 서버 발주 → HBM·D램 주문을 연계해 살펴보고, 공사 지연과 실제 반도체 주문 감소를 구분해야 한다.

AI 인프라 확대와 함께 미국 내 AI 활용에 대한 규제·감독 변화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 주도 의회에서는 AI의 안전성·투명성·책임을 둘러싼 논의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미국 사업에서 AI를 활용하는 기업은 데이터 사용과 AI 결과 검증, 인간의 검토, 사고 대응과 책임체계 등 AI 운영 전반의 관리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기업 체크포인트

① **미국 투자 이행관리**: 투자·착공·생산·고용 실적과 일정 변경 사유를 일관되게 관리

② **중국 생산거점 규제관리**: 공장별 장비 반입·유지보수 허가, 갱신 시점과 대체조달 방안 점검

③ **AI 수요 선행지표 확인**: 데이터센터 착공·전력망 연결·서버 발주와 실제 HBM·D램 주문을 연계해 확인

④ **AI 활용 규제 대응**: 미국 사업에 활용하는 AI의 데이터·결과 검증·인간 검토·사고 대응·책임체계 점검

2 자동차·배터리

세액공제 복원 여부와 별개로 생산 유연성·공급망 요건 충족 역량 강화

자동차·배터리 기업은 전기차 지원제도의 복원보다 수요와 지원조건이 달라져도 대응할 수 있는 생산·공급망 구조를 먼저 확보해야 한다. 전기차 구매지원의 복원에는 추가 입법과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변수가 있지만, 미국 내 배터리 생산과 핵심 공급망을 확대하려는 방향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자동차 기업은 전기차 수요의 회복 속도에 따라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의 생산비중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 미국과 멕시코 생산체계에서는 주요 부품의 원산지와 조달지역을 점검하고, 북미 원산지 기준이 달라질 경우에 대비한 대체 공급처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배터리는 원재료의 생산국뿐 아니라 공급업체의 지분구조와 실질소유자, 우려국 기업과의 계약관계까지 추적할 수 있는 공급망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중국 등 우려국과 연결된 원재료·부품을 사용하면 미국의 생산지원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확대는 에너지저장장치에 새로운 시장을 만들 수 있다. 이에 따라 전기차 시장의 성장속도만을 기준으로 생산능력을 배분하기보다 전기차용 배터리와 에너지저장장치 간 생산 포트폴리오를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기업 체크포인트

① **제품 포트폴리오 유연화:** 전기차·하이브리드·에너지저장장치의 수요 변화에 맞춰 생산비중 조정

② **공급망 추적성 확보:** 원산지뿐 아니라 공급업체의 지분·실질소유·계약관계까지 관리

③ **북미 생산체계 재점검:** 미국·멕시코 생산거점과 부품 원산지, 대체조달 경로를 함께 검토

3 조선·방산

정책적 협력을 실제 발주와 미국 내 사업으로 연결

미국의 국방 생산능력과 조선역량 확충, 동맹국의 역할 확대라는 방향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미국이 동맹국의 조선역량을 활용하더라도 한국 기업의 참여범위는 함정의 종류와 사업형태, 미국 내 생산요건, 국방예산과 조달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국 기업은 미국 조선시장을 하나로 보기보다 함정 유지·보수·정비, 비전투 지원함, 상선, 미국 현지 신조 등 사업별 진입조건을 구분해야 한다. 기존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정비사업과 미국 조선소 투자 및 현지 공급망 참여가 필요한 사업을 나눠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국방사업은 정책 발표나 수권 규모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최종 세출예산과 조달규정, 계약절차를 거쳐야 실제 발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외 건조가 허용되는 함정 유형과 미국 내 투자·생산요건, 계약 발주시점을 확인한 뒤 투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미국 조선소 투자도 정치적 요구보다 장기 수주와 생산성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한다. 투자·생산·고용 계획을 제시한 경우에는 실제 이행성과와 일정 변경 사유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

기업 체크포인트

① **진입영역 구체화:** 정비·지원함·상선 등 실제 참여 가능성이 높은 분야부터 확대

② **미국 현지화의 경제성 검증:** 조선소·정비거점 투자와 장기 수주 간 연결 가능성 확인

③ **예산과 발주시점 확인:** 정책 발표보다 최종 세출예산·조달규정·계약 일정을 기준으로 투자 판단

4 에너지·전력망

전력수요 확대를 수주로 연결하되, 프로젝트 경제성은 별도 검증

AI 확산으로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가 증가하면서 발전설비·에너지저장장치·전력망 투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지역별 전력·용수 여건과 주민 비용부담이 주요 정책과제로 부상하면서, 같은 유형의 사업도 입지에 따라 추진속도와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

데이터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원전·소형모듈원전, 가스발전,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뿐 아니라 변압기·송배전·전선·설계·조달·시공 역량이 함께 필요하다. 따라서 AI 투자를 데이터센터 → 발전·저장설비 → 전력망으로 이어지는 인프라 수요로 보고, 한국 기업의 기술과 생산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수주 기회를 발굴해야 한다.

다만 전력수요 증가나 정책적 지원이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대형 프로젝트는 자금조달과 인허가, 전력망 연결, 장기 구매계약, 공사기간과 비용 초과의 부담주체를 별도로 검증해야 한다. 회수기간이 긴 사업은 최소 구매량과 가격보장, 사업 변경·취소 시 손실 분담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별로 전력망 연결기간과 전력가격, 용수·환경 기준, 인센티브가 다르므로 입지별 사업비와 추진 일정을 비교한 뒤 투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기업 체크포인트

① **AI 연계 수주 기회 발굴:** 발전·저장설비와 변압기·송배전 등 기업의 역량을 활용할 분야 구체화

② **주별 사업조건 비교:** 전력망 연결기간·전력가격·용수·인허가·인프라 비용을 입지별로 검토

③ **프로젝트 사업성 검증:** 자금조달·장기계약·공사기간·비용 초과·사업 취소 시 책임을 계약에 반영

5 철강·산업재

관세 부담 장기화에 대비해 원산지·현지조달 구조 재설계

보호무역은 중간선거 이후에도 한국 기업이 상수로 관리해야 할 변수다. 일부 관세의 법적 근거가 제한된 이후에도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다른 통상법상 권한을 활용해 관세정책을 이어갔다. 적용 방식은 달라졌지만, 관세를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미국 내 생산과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은 유지되고 있다.

철강·산업재 기업은 관세 완화를 전제로 하기보다 현재 적용되는 품목별 관세와 원산지 기준을 기본 시나리오로 설정해야 한다. 국가별 평균관세보다 수출품의 품목분류와 원산지, 추가관세의 법적 근거와 중첩 여부를 기준으로 실제 관세부담을 계산할 필요가 있다.

미국 현지 생산이나 조달 확대가 관세와 물류비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도 비교해야 한다. 이때 비용 절감뿐 아니라 공급업체 변경에 따른 품질·납기 위험과 전환비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관세가 변경될 경우 비용 부담주체와 환급금 귀속, 판매가격 재협상 기준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관세 변동이 거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필요가 있다.

기업 체크포인트

① **실제 관세부담 재산정:** 수출품별 품목분류·원산지·추가관세를 반영해 최종 부담액 산출

② **생산·조달 구조 재점검:** 미국 현지생산·조달에 따른 관세·물류비 절감효과와 전환비용 비교

③ **계약조건 정비:** 관세 부담주체·환급금 귀속·법령 변경 시 가격조정 조건 명문화

산업별 공통 대응 방향

산업별로 노출되는 정책과 사업조건은 다르지만, 앞서 살펴본 대응에는 공통점이 있다. 정책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보다 현재 적용되는 조건을 기준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정책 결정 주체와 사업 일정을 좌우하는 요인을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정부 간 협력이나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개별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보장하지 않는 만큼, 투자 결정은 실제 수요와 현금흐름, 자금조달, 인허가와 계약조건을 기준으로 내려야 한다.

1 현재 적용되는 조건부터 확인
관세 인하나 지원 확대를 미리 전제하지 않고, 현재 시행 중인 관세·수출허가·지원조건을 사업계획의 기준으로 설정

2 정책 결정 주체별로 구분해 관리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수출통제, 의회의 예산·감독, 주정부의 인허가·전력·용수·인센티브가 각각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

3 정책적 지원과 사업성을 별도로 판단
대미 투자 요구나 정부 간 협력이 있더라도 고객수요·현금흐름·자금조달· 인허가·공사비를 기준으로 투자경제성 검증

4 정책기한에서 역산해 준비
허가·면제·유예·지원제도의 만료와 갱신 시점을 기준으로 대체조달·계약변경·생산전환에 필요한 기간을 역산

결국 민주당 주도 새 의회 출범을 앞둔 지금, 한국 기업의 대응은 미국 정책의 변화를 정확히 예측하는 데 있지 않다. 현재 적용되는 조건을 기준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의회와 행정부의 충돌, 주정부의 정책 변화, 관세·허가·지원조건의 조정에 따라 투자·생산·조달계획을 바꿀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산업마다 노출되는 위험과 기회는 다르지만, 사업 일정과 공급망, 계약조건, 프로젝트 경제성을 기업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수준까지 구체화하는 것이 공통된 대응 방향이다.

04 경영진은 무엇을 다시 점검해야 하는가?



경영진은 무엇을 다시 점검해야 하는가?

새 의회와 행정부의 정책 방향이 분명해질 때까지 기다려도 될까?

2027년 1월 민주당 주도의 새 의회가 출범해도 미국 내 생산 확대와 대중국 견제라는 큰 방향은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의회의 예산·감독 강화로 연방 지원의 집행 속도와 조건이 달라지고, 주정부별 인허가와 투자 여건의 격차도 커질 수 있다.

따라서 큰 방향이 유지된다고 기존 사업계획을 그대로 밀고 나갈 수는 없다. 한국 기업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미국 내 생산 확대와 공급망 재편에 맞춰 대미 투자와 현지화 계획을 세워 왔다. 이 전략을 전면 수정할 필요는 없지만, 사업별 투자 순서와 실행 속도는 다시 점검해야 한다. 지원과 인허가가 예정대로 진행되는 사업은 추진하고, 전력·인력·고객 수요가 부족한 사업은 투자 시기와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

그렇다고 모든 조건이 분명해질 때까지 기다리면 시장 대응이 늦어지고, 기존 계획을 그대로 실행하면 과잉투자와 유휴 생산능력이 생길 수 있다. 필요한 것은 새 전략이 아니라 기존 계획 중 무엇을 추진하고, 늦추고, 보류할지 가려내는 일이다. 연방·주정부 지원, 고객 수요, 전력·인허가, 공급망 요건을 기준으로 투자 범위와 속도를 조정하고, 사안별로 어느 경영진이 결정하고 책임질지도 정해야 한다.

경영진별 핵심 점검과제와 주요 Action



자료: PwC US, 'What the midterms mean for business—and what comes next'(2026.11)를 바탕으로 재구성

주요 경영진별 점검 및 실행 방향(상세)

새 의회 출범 이후 예상되는 사업조건의 변화에 맞춰, 경영진별로 대미 투자·운영계획의 점검사항과 실행 방향을 살펴본다.

CEO (최고경영자) : 미국 현지화의 범위와 투자속도 재조정

점검 사항

- 기존 대미 투자계획의 고객 수요·전력·인허가· 현지인력 확보 여부
- 미국 연방·주정부 지원이 늦어져도 추진 가능한 사업인지 여부
- 미국 현지화가 한국 공장의 가동률과 연구개발· 핵심공정에 미치는 영향
- 발표한 투자계획과 실제로 집행 가능한 투자 규모 간 차이

실행 방향

- 기존 계획을 예정대로 집행·단계적 집행·조건 충족 후 집행·재검토로 재분류
- 공장 건설·장비 발주·시험생산·추가 증설마다 별도의 승인조건 설정
- 장기 고객계약, 전력·용수, 인허가와 핵심인력 확보 여부에 따라 투자순서 조정
- 미국에 이전할 생산기능과 한국에 유지할 연구개발·설계·핵심부품 기능을 명시
- 투자일정 변경이 국내 공장과 협력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이사회 투자심사에 반영

예시 미국 고객의 장기 구매계약과 전력 공급이 확보된 공장 투자는 예정대로 추진하되, 추가 고객 물량과 미국 연방· 주정부 지원이 확정되지 않은 증설 투자는 장비 발주를 늦추고 연구개발과 핵심부품 생산은 한국에 유지한다.

CFO (최고재무책임자) : 한·미 생산비용과 미국 정부지원 의존도 재점검

점검 사항

- 한국 생산·대미 수출과 미국 현지생산의 총비용 차이
- 보조금·세액공제·주정부 인센티브 제외 시 투자수익률
- 지원금 지급, 전력망 연결과 양산 지연 시 현금흐름
- 미국 공장의 저가동률이 연결재무제표와 차입여력에 미치는 영향

실행 방향

- 한국 수출과 미국 현지생산의 총원가·수익성 비교
- 미국 정부지원을 제외해도 수익성이 유지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투자 우선순위와 집행규모 조정
- 지원금 지급과 공장 가동 지연이 현금흐름· 자금조달비용에 미치는 영향 재산정
- 정부지원·전력·장기 고객계약의 확정 여부에 따라 자본을 단계적으로 집행

예시 미국 연방 세액공제와 주정부 인센티브를 포함해야 목표수익률을 충족하는 투자는 부지 확보와 설계까지만 진행하고, 공장 건설과 장비 발주는 지원 확정·전력 확보·장기 고객계약 체결 이후 승인한다.

4 경영진은 무엇을 다시 점검해야 하는가?

COO (최고운영책임자) : 미국시장 접근을 제한할 공급망 식별

점검 사항

- 관세만 추가되는 품목과 미국 지원·조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품목
- 공급업체의 원산지·실질소유자와 중국 기업 간 지분·기술 관계
- 핵심 원재료·부품의 최종 생산자와 생산지역
- 대체 공급처 확보와 고객 승인, 제품 변경에 필요한 기간

실행 방향

- 공급망 위험을 비용 상승·지원 배제·시장 접근 제한으로 구분
- 원산지·실질소유자·미국 지원요건을 연결한 공급망 지도 작성
- 대체가 어려운 핵심 품목부터 추가 공급처를 확보하고, 필요한 재고와 제품 변경방안 마련
- 미국 요건 미충족에 대비해 정보제공·조달처 변경·계약해지 조항 보완

예시 중국 기업과 연계된 핵심소재 때문에 미국 세액공제나 정부조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면, 단기적으로 필요한 물량은 확보하되 미국 요건을 충족하는 대체 소재를 미리 선정하고 고객 승인을 추진한다.

CIO·CAIO (최고정보·AI책임자) : 미국 사업에 활용하는 AI의 통제·검증체계 구축

점검 사항

- 미국 직원·고객의 고용·가격·거래조건·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AI 식별
- AI 학습·운영에 사용하는 데이터의 출처와 사용 권한
- AI 결과를 담당자가 확인하고 최종 결정하는 절차
- 한국 본사와 미국법인의 모델 관리·결과 승인·민원 대응 책임
- 외부 AI 사업자의 모델 변경과 기업 데이터 재학습 가능성

실행 방향

- 채용·인사평가·가격 결정·고객 심사·안전 관련 AI를 고위험 AI로 별도 관리
- 데이터 출처·모델 변경·검증 결과·업무 승인기록을 추적 가능한 형태로 보관
- 채용 탈락·가격 변경·거래 거절 등은 담당자가 확인한 뒤 최종 결정
- 본사와 미국법인의 모델 관리·결과 승인·민원 대응 책임을 명확히 구분

예시 한국 본사가 개발한 채용 AI를 미국법인이 사용할 경우, 본사는 데이터와 모델의 편향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증하고 미국법인은 AI가 제외한 지원자의 사유를 현지 인사담당자가 확인한 뒤 최종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

4 경영진은 무엇을 다시 점검해야 하는가?

CRO·CISO (최고위험관리·정보보호책임자) : 미국 사업의 사이버 복원력과 한·미 사고 대응체계 강화

점검 사항

- 미국 사이버 사고의 본사 보고기준·보고시점과 주요 대응별 승인 책임
- 미국 규제기관 신고와 한국 본사 공시의 시점·내용 일치 여부
- 클라우드·통신·전력·핵심 공급업체 중단이 한·미 사업에 미치는 영향
- 핵심 데이터·생산시스템과 AI 에이전트의 보안·복구 수준

실행 방향

- 사고 유형별 본사 보고기준·보고시간과 신고·공시·복구별 승인 책임 설정
- 미국 신고·한국 공시·고객 통보·언론 대응 절차 통합
- 핵심 시스템과 외부 서비스의 중단을 가정한 한·미 공동 복구훈련 실시
- 핵심 데이터와 AI 에이전트의 접근권한·행위기록· 복구체계 강화

예시 사이버 사고에 대한 의회 감독 강화에 대비해, 미국 신고부터 한국 공시·고객 통보·사업복구까지 한·미 공동훈련으로 사전 검증한다.

CIO·CAIO (최고정보·AI책임자) : 미국 사업에 활용하는 AI의 통제·검증체계 구축

점검 사항

- 투자일정과 현지 채용·교육·한국 파견 일정의 일치 여부
- 설비 설치·시험생산·품질관리 인력의 현지 확보 가능성
- 비자 발급 지연 시 활용할 현지 대체인력과 원격지원 체계
- 주정부 고용약정과 실제 공장 가동일정 간 차이

실행 방향

- 공장 건설·설비 설치·시험생산·양산 단계별 필수 인력과 투입시점 설정
- 핵심 직무별 현지채용·한국 파견·외부인력·자동화 비중 조정
- 비자 지연에 대비한 현지 대체인력과 원격 기술 지원체계 구축
- 투자일정 변경에 맞춰 채용·교육·파견 일정과 주정부 고용약정 조정

예시 미국 공장의 설비 설치를 담당할 한국 엔지니어의 비자 발급이 늦어지면, 장비업체와 함께 현지 엔지니어를 먼저 교육하고 한국 본사의 원격지원과 필요한 기간의 단기 파견을 결합해 시험생산 일정을 유지한다.

경영진 대응 로드맵: 시기별 점검 과제

경영진의 대응 과제는 시점에 따라 무게중심이 달라진다.

2027년 1월 3일 새 의회가 출범하기까지 남은 약 50일 동안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의회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조치를 서둘러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이 기간에는 어떤 조치가 새로 승인·시행되는지, FY2027 예산 협상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2027년부터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의 조사·감독과 예산 협상에 새 주정부의 정책 변화까지 더해진다. 기업은 투자 지역과 지원 조건, 공급망 요건을 다시 살피고, 대외적으로 내놓는 설명이 일관된지도 점검해야 한다. 남은 2년 임기 동안에는 정책이 바뀔 때마다 그때그때 대응하기보다 투자·생산·조달 계획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상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대응은 어느 경영진이 언제 무엇을 점검할지 미리 정해 두는 데서 시작된다.

새 의회 출범 전후 경영진별 대응 과제

	레임덕 회기 ~ 2027.1.3 새 의회 출범 전	**2027년** FY2027 새 의회 출범 후	**남은 임기 2년** ~2029년
	→ 행정부 조치 확인	→ 의회·주정부 정책 변화 대응	→ 사업 구조 상시 관리
CEO 최고경영자	행정조치 확인 → 프로젝트별 의사결정 기준 확정	실제 조건을 반영해 투자지역·규모·순서 조정	분기별 재심사를 통한 투자 포트폴리오 상시 조정
CFO 최고재무책임자	예산·지원 지연을 반영한 현금흐름 스트레스 테스트	실제 지원조건·전력비·관세를 반영한 투자안 재산정	환율·관세·가동률 변화에 따른 현지생산 전환 기준 상시 운영
COO 최고운영책임자	중국 공장 허가와 함께 핵심 품목별 원산지·실질소유·허가 만료일 조사	미국의 지원·조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품목의 대체 공급처 선정 및 고객 승인 착수	공급망 요건과 교체기간을 연결한 상시 공급망 지도 운영
CIO·CAIO 최고정보·AI책임자	미국법인의 AI 사용 현황을 조사하고 채용·가격·고객심사·안전 관련 고위험 AI 식별	의회 조사와 입법 논의를 반영해 데이터 사용·인간 검토·결과 검증·민원 대응절차 보완	모델 변경과 외부 AI 사업자까지 포함해 AI 검증·승인·책임체계 상시 운영
CRO·CISO 최고위험관리·정보보호책임자	행정조치별 법적 근거·시행일·소송·사업 영향과 담당 임원을 등록해 관리	정책 리스크 대장을 본사·미국법인이 공동 운영하고 사이버 사고 신고·공시·복구 훈련 실시	법원 판단과 사고 사례를 반영해 규제 대응과 사이버 복원력 체계 지속 개선
CHRO 최고인사책임자	공장 건설·설비 설치·시험생산·양산 단계별 필수 직무와 현지채용· 파견·대체인력 계획 확정	투자 일정과 이민정책 변화에 맞춰 채용·비자·파견·교육 일정을 즉시 조정	생산 단계별 필요 인력을 확보하고, 핵심 직무의 현지 채용·육성 확대

자료: 삼일PwC 경영연구원

Business Contacts

Industrials and services

김진섭 파트너
jin-sub.kim@pwc.com

Energy, utiities and resources

서용태 파트너
yong-tae.seo@pwc.com

유원석 파트너
won-seok.yoo@pwc.com

Consumer Markets

이승훈 파트너
sung-hun.lee@pwc.com

김재환 파트너
jaehwan.kim@pwc.com

Health industries

서용범 파트너
yongbeom.seo@pwc.com

Technology, media and telecommunications

박종우 파트너
jong-woo.park@pwc.com

강찬휘 파트너
chan-hwi.kang@pwc.com

Financial services

진선근 파트너
sungeun.jin@pwc.com

김은섭 파트너
eun-seop.kim@pwc.com

Author Contacts

삼일PwC 경영연구원

이은영 상무
eunyoung.lee@pwc.com

김효진 선임연구원
hyojin.h.kim@pwc.com

정승은 연구원
seungeun.jung@pwc.com

삼일PwC 경영연구원

최재영 경영연구원장
jaeyoung.j.choi@pwc.com



삼일PwC의 간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 및 지식전달을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구체적인 회계이슈나 세무이슈 등에 대한 삼일PwC의 의견이 아님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간행물의 정보를 이용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삼일PwC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본 간행물의 정보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삼일PwC 전문가의 자문 또는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S/N: 2611W-RP-128

© 2026 Samil PwC.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Korea group of member firms and may sometimes refer to the PwC network. Each member firm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

pwc.com/kr
pwcconsulting.co.kr